

전남대 성추행·채용 비리·인권 침해 질타

국감서 전자도서관 기부금·화순전남대병원 특혜 진료도 지적 보건의료노조 규탄 집회…법학전문대학원 성폭력 대책위 회견

“전남대 교수 채용 비리가 있다”, “전남대에서 발생한 2건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대학 인권센터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냐”, “전남대 디지털도서관 건립비용모금과정에서 기부금을 강제했다”, “화순전남대병원에서는 교수 특혜 진료도 있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전남대·전남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남대 교수 채용과 인권센터의 성 관련 사건 처리, 디지털도서관 건립과정에서 기부금 모금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 화순전남대병원 교수의 특혜진료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전남대 학교운영 전반 문제 지적=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전남대 철학과 교수 채용 비리가 있다”며 “교수 채용 과정이 중단됐고, 감사 결과는 몇 달이 지났는데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전남대 산학협력단 회식 자리에서 성 관련 피해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해임되고, 법학전문대학원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정보가 새나가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과정에서 대학 인권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느냐”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전남대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제대로 된 분리조치도 하지 않고, 허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징계 요청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전남대 전자도서관 기부금 관련 지적도 이어졌다.

강민정 의원은 “전남대 디지털도서관 건립비용으로 국비 210억원을 지원받아 놓고도 조교 등 직원들에게 기부금을 내

라고 강제했다”며 “전남대 총장은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해보라”고 촉구했다.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특혜와 과다청구 지적=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A교수의 부인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병실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남대병원 감사실이 해당 교수에게 부당 입원료 436만원을 징계 부과금으로 부과했지만, 노조는 부당 입원료가 653만원에 달한다고 밝혀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며 “병원장은 징계 부과금을 정확히 산정하고 갑질 문화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해당 A교수가 간호사들에 대해 도를 넘는 갑질을 했다고도 제기했다.

◇국정감사 장 앞에선 집회 잇따라=전남대·전남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자 해당 기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잇따랐다.

이날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광주시교육청에서는 화순전남대병원 교수의 갑질과 가족 진료 특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성폭력 사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학 교병원지부” 회원 20여 명은 이날 광주시

교육청 본관 앞에서 ‘폭언·폭행·갑질·가족 진료 특혜를 일삼은 화순전남대병원 A교수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학생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전남대는 성폭력 피해자와 그 연대인에게 공개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대 총장은 피해자 보호조치 약속을 이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고소 취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올해 안에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학 교병원지부” 회원 20여 명은 이날 광주시

교육청 본관 앞에서 ‘폭언·폭행·갑질·가족 진료 특혜를 일삼은 화순전남대병원 A교수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학생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전남대는 성폭력 피해자와 그 연대인에게 공개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대 총장은 피해자 보호조치 약속을 이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고소 취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올해 안에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학교비정규직 법제화 촉구 삭발식

20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노조원들이 학교비정규직 법제화와 집단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삭발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회

교사 해임 관련 김인전 전 이사장 국감 증인 출석 앞두고

광주 명진고, 국회의원 2명에 사전 로비 ‘논란’

“부인이 후원금 제의해와 거절”

강민정·윤영덕의원 “황당했다”

광주시교육청 국정감사에 앞서 광주 명진고 교사 해임 논란과 관련해 명진고(도연학원) 측이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측에 사전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강민정 의원 측은 20일 일부 기자들과

만나 “저희 의원이 손모 교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한 뒤, 도연학원 김인전 전 이사장 부인 최신옥 전 이사장이 의원실로 전화를 걸어와 ‘우리는 억울하다. 후원금을 보내드리겠다’고 제의해와 다소 황당했다”고 밝혔다.

윤영덕 의원 측은 “김인전 전 이사장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즈음에, 최신옥 전 이사장이 의원실로 전화를 걸어와 ‘계좌번호를 불러 달라. 현금으로 후원금을 내야 하느냐’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 측은 윤 의원 측은 최 전 이사장의 제의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또한 “여수 인터넷 기자가 의원을 면담하자고 연락이 와 지난 9일 광주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의원과 해당 기자 간 면담 시간을 가졌는데, 명진고 교감 직무대리인 최신옥 전 이사장 딸이 함께 나타나 명진고 사정을 설명한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배포한 자료에서 “명진고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최신옥 씨는 이미 각종 비리 혐의로 형을 받은 사람이다. 그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에게 금품까지 건네려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신옥 전 이사장은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아는 의원이 강민정 의원이 교육위원회 소속이라고 해 전화한 적은 있지만, 윤영덕 의원실에는 전화하지 않았고, 후원금 얘기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윤영덕 의원 측은 “본인이 최신옥 전 이사장이라고 밝히면서 ‘한 번만 의원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거듭 최 전 이사장의 전화 사실을 확인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국선변호인 교도소 한번 찾아오지 않았어요” 외국인 피고인의 ‘법정 하소연’

광주지법 항소심 재판부 당황 “변호사에게 찾아가라 하겠다”

“판사님, 변호사가 한 번도 (교도소 직접) 오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지난 15일 광주지법 301호 대법정. 중국어 통역인을 통해 피고인 A(54)씨 하소연을 들은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 항소심 재판부는 당황한 듯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끝낸 뒤 상고절차 등을 안내하고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순간, A씨가 중국어로 “제 개인 통장에 있는 돈으로 배상하겠다는 말을 여러번 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통역인에게 항변하면서다.

재판부는 중국어로 하소연하는 A씨 말을 통역인에게 전달받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가 “변호사가 한 번도 (교도소를) 찾지 않았다”는 답변에 순간 당황한 듯했다. A씨는 상고 절차를 안내받자 “상고하더라도 (이런 방식이면) 똑같이 이뤄질 것 아니냐”며 울먹였다. 재판장은 “담당 변호사에게 찾아가라고 하겠다”며 A씨를 내보냈다.

A씨 하소연대로라면 글로벌 시대임에도, 법정에서 외국인의 재판 받을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A씨는 국선전담변호인이 지정됐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피고인들을 위해 법원이 무료로 변호사를 찾아주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선전담변호인은 법원에서 정

해진 보수를 받으며 국선 사건만 담당한다. 광주지법에는 7명이 있으며 광주교도소 법은 1명의 국선전담변호인을 두고 있다.

A씨는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절도와 주거침입,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이날 항소심 선고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나왔다.

A씨는 지난 5월 8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B씨 집에 들어가 현금 950만원을 갖고 나오다가 하면, 5월 11일에는 아무도 없는 곡성군 C씨 집에 들어가 3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60~70대 노인인 피해자들은 경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현금 인출 우려가 있으니 현금을 찾아 집 전화기 옆에 두고 경찰관이 갈테니 집 밖에서 기다리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거액을 놓고 집을 비웠다”는 답변에 피해를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사회적 피해가 심각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1심 형량(징역 2년 6개월)도 통상적인 양형(징역 3년)에 견주 무겁지 않은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A씨에게 지정된 외국인 통역인이 국선전담변호인 접견에 통역으로 참여했다며 제출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수 기자 dok2000@kwangju.co.kr

황주홍 전 의원, 금품 제공 일부 인정

황주홍(68) 전 의원이 재판에서 금품 제공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송백현)는 20일 황 전 의원과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황 전 의원이 비서 등과 공모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700여만원을 제공했다”며 “자원봉사자 77명에게 7070만원을 제공했고 별고유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황 전 의원의 비서와 보좌관, 선거캠프 관계자, 금품을 받은 선거구민 등 20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내용과 관련, 황 전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

수 금품 제공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누가 제공했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숫자가 많은 데다 일부는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황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검찰이 지난 6월 강진에 있는 황 전 의원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자 황 전 의원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지난날 7일 검거됐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